

#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

서울시, 관련 조례 개정안 공포  
기존 267개 역 제한 기준 삭제  
사업대상지 1.6㎢ 늘어 16㎢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

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 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시는 역세권을 교차역,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규정해 사업대상지가 시내 307개 역 중 267개 역으로 제한됐다.

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서울시 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대상지 면적은 기존 14.4㎢에서 16㎢으로 1.6㎢ 넓어진다. 늘어난 면적의 10%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 물량이 약 1만 9000호 이상 증가하게 된다.

시는 조례 시행 기간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이상 연장했다.

현재 계획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인가가 완료된 30곳(1만2890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30곳(9512가구)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21곳(9558가구) 등 총 3만1960가구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튤립 만개... 봄 정취 만끽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튤립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 활짝 핀 튤립을 보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시, 여성관리자 23%... 3년 연속 1위

17개 시·도 평균 15% 크게 웃돌아  
최근 5년 신규채용 여성 50% 넘어

서울시는 2018년 기준 5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 23.1%로 3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7개 시·도 평균 비율인 15%를 크게 웃돈 수치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치를 5.5%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신규채용자 중 여성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전체 공무원(자치구 포함)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연평균 1.8% 증가하는 등 꾸준히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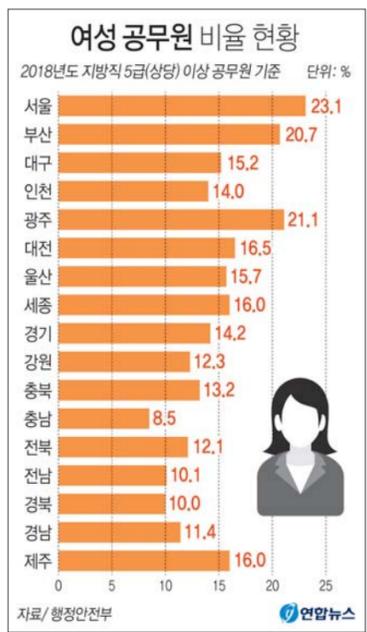
그동안 시는 5급 승진 선발 시 동일조건일 경우 여성을 우선 고려하고 주요 핵심 부서에 여성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는

등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위직으로 진출 가능한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제도 시행으로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인사과, 감사담당관,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의 여성 비율은 2013년 446명(39%)에서 2019년 1월 기준 815명(46.8%)으로 7.8%포인트 증가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여성관리자 증가가 시가 승진·전보 등 인사 운영에 성평등 가치를 담아 운영하는 결과”라며 “실제 의사결정권이 있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정책 마련, 실행에 균형감이 더해지고 있다. 서울시의 선도적인 여성관리자 확대 정책이 우리 사회의 견고한 유리 천장을 깨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원삼면 토지거래때 용인시 허가 받아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대는 올해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거래 동향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투기 예방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택되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특히 투기목적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대책’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위 ‘뺨대방’도 20여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오늘 철거

4년8개월만에... 유가족 자진철거 의사  
서울시청사 지하 서고에 임시보관키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에서 열린 이안식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이 18일 모두 철거된다. 2014년 7월 지어진 이후 약 4년 8개월 만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천막 안에 있는 희생자 영정을 옮기는 이안식이 진행된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자진철거 의사에 따른 것이다.

이안식에서는 묵념을 시작으로 종교의식, 진혼식 등이 열린다. 분향소에 있는 300개의 영정은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고에 임시 보관된다.

분향소 천막 14개 동은 18일 오전 10시 철거된다. 철거가 끝난 후 이곳에는 ‘지역·안전 전시공간’이 조성된다.

지역·안전 전시공간은 현 분향소 자리에 79.98㎡ 규모로 만들어진다. 현재의 절반 규모다.

전시공간은 2개의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전시공간을 직접 운영하되 유가족, 시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전시공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안전 전시공간은 다음달 12일 시민에게 공개된다. /김현정 기자

## 교통사고 10건 중 1건 고령 운전자 ‘짱’

경기도, 면허 반납땀 지역화폐 지급

경기지역 교통사고 10건 중 1건꼴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 같은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만 627건으로, 이 가운데 4795건(9.5%)은 고

령자가 운전했다.

또 사망자 784명 중 126명(16.1%)이, 부상자 7만7551명 중 7161명(9.2%)이 고령자 운전으로 발생했다.

경기지역 운전면허 소지자 805만9737명 중 60만4941명(7.5%)이 고령자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65~70세 33만 6601명, 71~80세 23만3502명, 80세 이상 3만4828명 등이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4160건, 2016년 4283건, 2017년 4795건 등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선 7기 들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다.

하반기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쓸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 1인당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우선 올해 1만명에게 지원, 2022년까지 총 3만7000명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3일 개정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 /의정부=김승열 기자

## 서울시, 올 데이케어센터에 154억 투입

서울시는 어르신돌봄 ‘데이케어센터’에 올해 154억1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데이케어센터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노인에게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우선 시는 데이케어센터 확충 사업에 33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데이케어센터를 새롭게 설치하는 자치구·법인에는 사업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지원을 받은 시설은 관할 자치구와 협약을 통해 최소 5년 이상 사업을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아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 등 비영리단체는 관할 자치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치구의 1차 심사 후 시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한다.

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에 주·야간 운영비, 환경개선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으로 120억4000만원을



신길5동 데이케어센터 물리치료실 모습. /서울시

지원한다. 현재 시에는 총 391개의 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중 192곳(49%)이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는 공인인증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매년 평균 6000만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이용자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는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요양시설 설립 시 데이케어센터를 병설로 설치하고 건물을 임대하거나 종교시설 활용,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등 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